

# EPR 제도 개선방안



**박준우**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1. 서론

2003년 우리나라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EPR 제도가 가져온 환경적 경제적 이득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까지 4년간 시행 결과 4,690천 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1조7,256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과 같은 부차적인 사회적 편익의 창출도 막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예치금제도를 포함하여 EPR 제도는 영세민들의 호구지책 정도로 여겨졌던 재활용산업을 국가산업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데 더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가 버린 폐기물을 생산자들이 재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항하던 기업들이 앞장서서 재활용이 용이한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체계를 속속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 2. 재활용에 대한 접근 전략의 수정 및 EPR 제도 보완의 필요

이처럼 EPR 제도의 시행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만하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취약점이 있기 마련이며 그동안 정책여건도 변하였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기본인식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항상 우선이 아니며 재활용도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다른 대인보다 나을 때만이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재활용의 양적 증대에서 이제는 질적 향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물질 재활용이 반드시 열적 재활용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

여야 하며 재활용정책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EPR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제도 발전을 위한 보완적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

## 3.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첫째로** 재활용 촉진정책과 맞지 않는, 재질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기술발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사용규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로** 품목에 대한 조정-신규품목의 추가와 자율적 재활용 품목의 제외가 필요하다. **셋째로** 재활용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품목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로** 매년 재활용 의무율이 단조증가하게 되어 있는 현행 의무율 제도를 수정하여 만성적인 बैं킹이나 의무이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시행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 재활용의무 면제제도를 폐기물 발생량도 고려하는 기준으로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공제조합의 공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조합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조합의 공공기능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로** EPR제도를 지원하는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획일화된 분리배출제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자율적 실시, 원자재 폐기물 확보를 위한 재활용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고기입찰제도에 대한 보완과 재활용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종말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보전이나 대행처리와 같은 지원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환경  
시상